

## Education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 2007 교육 동향 : OECD 지표

국어 개요

- 교육 동향은 OECD 및 협력국가의 교육에 대한 자료와 분석을 기초로 한 연간 자료집이며, 교육 성취 및 참여, 교육비, 평생 교육 그리고 학교 여건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007 년판은 고등교육을 특별히 다루는데 고등교육 참여가 급속히 확장했음에도 고등교육 자격증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는 조짐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 그리고, 처음으로 교육 동향은 교육 효율성 문제를 검토하고 다른 직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격대비가치 효과의 개혁방안을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 차원에 필요한 노력 사항을 일부 지적해 준다.

OECD 교육 동향은 30 개 OECD 국과 나머지 협력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가능한 최신 지표를 폭넓게 보여주는 OECD 연차 데이터 및 분석 요약전이다. 교육 동향이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참여 및 학업 성취
- 학교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및 민간지출
- 평생학습 현황
- 학생 및 교사 여건

2007 년판은 고등교육 참여 확장이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최근 10 여 년간 OECD 국의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만큼 고학력 인력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아니면 대학 이수자 모두가 언젠가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 것인가? 2007 년판 교육동향에서는 OECD 국의 최근 데이터와 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 참여 증대가 개인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력 ‘거품’ 현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교육동향에서 처음으로 교육 효율성 문제가 검토된다(지표 B7).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는 아직 발굴 단계다. 정부재정에 압력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다른 직업분야가 이루었던 것처럼 교육분야도 최상의 가격대비가치 효과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할 노력사항이 일부 지적되고 있다.

교육 동향 2007 년판 주요 결과:

### OECD 국 중등교육 수료자 비율은 뚜렷이 늘어났다.

29 개 OECD 국 중 22 개국과 경제협력국인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는 성인의 60% 이상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6%는 고등교육을 마쳤다. 다음의 결과도 드러난다:

- OECD 국가 25-34 세 연령층의 고등학교 수료자 비율은 45-54 세 연령층보다 평균 13% 높다. 이 경향은 특히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경제협력국 칠레에서 나타나며, 이 모든 국가에서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젊은 성인의 수가 20 퍼센트 포인트 또는 그 이상 증가하고 있다.

- 모든 OECD 국가 경우에 비교적 젊은층(25-34 세)은 이학사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장년층(55-64 세)보다 3 배 높지만 공학 분야에서는 조금 낮은 2 배 수준에 그친다. 몇년 후 덴마크,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는 노동시장을 떠나는 공학기사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공학기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젊은층은 사회과학, 경영 및 법 분야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분야를 전공한 성인 비율은 거의 3 분의 1 이 되며 비교적 젊은층은 장년층보다 3.5 배나 높은 수준이다.

- OECD 국의 교육전공자 분포를 보면 장년층 대비 비교적 젊은층

[표A1.1a. 성인층 교육 수준 \(2005\)](#)

비율이 거의 1 에 가까운 수준이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1 도 안 되어 현 세대가 퇴직했을 때 젊은 세대의 교육자 대체가 잠재적 문제로 제기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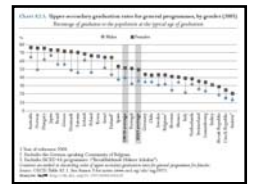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성별 균형이 변하고 있다.**

OECD 국가 데이터에 의하면 1995 년부터 고등학교 수료자 비율은 평균 7% 증가했다. 24 개 OECD 국 중 21 개국은 이 비율이 70%를 웃돌며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는 90% 이상 수준이다.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던 멕시코와 터어키는 다른 OECD 국가와의 격차를 좁혀 가고 있다.

- 여성이 남성보다 고등학교를 수료할 가능성이 높게 된 현실은 반전하는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수료자 비율이 남성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 스위스, 터어키이고 이는 경제협력국인 슬로베니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남성이 직업교육과목을 이수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높은 국가가 적잖이 있으나 여성 비율이 우세하거나 성별 차이가 없는 국가도 절반이나 있다.

**도표A2.3. 일반 고등학교 수료자 성별 비중 (2005)**



**고등교육 졸업자 역시 늘고 있다.**

OECD 24 개국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해당 연령층 학생의 평균 36%가 대학을 마쳤으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태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는 이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 배 늘었다. 그러나 일반대학 및 전문고등교육기관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 비율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해당 연령층의 일반대학 졸업자 비율은 오스트리아, 독일, 터어키의 20% 미만에서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의 40% 이상 수준 사이다. 이 졸업률은 단기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들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단기 직업교육과정은 졸업률이 9%이며 전문연구 자격증 취득 과정은 졸업률이 1.3%에 그친다.

- 19 개 OECD 국의 가용 데이터를 보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 가운데 평균 30%가 과정 이수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 A3.1. A급 고등교육 수료자 비중 (1995, 2000, 2005)**



**고등교육 입학에 기대하는 젊은층 비율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OECD 국에서 대학입학을 기대하는 15 세 연령층 비중은 대략 57%이지만 국가마다 차이를 보여 한국의 95%에서 독일의 21% 사이에 이른다. 지표들은 기대수준이 개인의 능력수준,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이민 상태에 따라 국가 내에서도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2003 년 PISA 실시 계기로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15 세 학생이 대학 이수를 기대하는 정도는 수학·읽기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학업 능력과 관계 없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15 세 학생은

좋은 여건의 학생보다 고등교육을 마칠 확률이 낮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생활 여건의 15 세 연령층은 원주민 학생보다 대학 이수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에 대한 이민 학생의 기대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학업 능력을 갖춘 원주민 학생에 비한다면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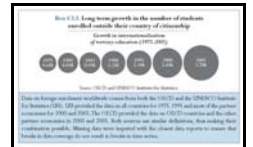
### 학교와 사회는 이민인구 통합이라는주요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OECD 국에서 국제이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와 노동시장 차원에 이민인들의 성공적인 통합에 관한 열띤 토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PISA 를 통해 이민 여건에 있는 15 세 연령층의 학업 성취율이 평가대상 되면서 이 토론 차원에 중요한 논지들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교육제도에 심각한 도전요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알 수 있다:

- 이민 인구가 비교적 많은 14 개 OECD 국의 PISA 수학 평가를 보면 이민 1 세대는 원주민 학생보다 평균 48 점, 즉 1 년 간의 학업진도 이상에 맞먹는 수준만큼 뒤쳐진다. 이민 2 세대의 성적도 40 점이나 처진 수준으로 원주민 학생과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및 협력국가인 홍콩과 중국은 이민 2 세대가 1 세대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스위스와 스웨덴의 성적 격차는 각각 31 점, 57 점 줄었다.

- 이민 여건 학생의 불리한 성적은 국가마다 크게 상이한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 벨기에, 독일은 이민 2 세대가 90 점이나 되는 차이까지 보인다.

그림C3.1. 해외 유학생 수  
장기 증가 추이



### 고학력 인력에 대한 사회 수요를 충족키 위해 부유한 가정 그리고/또는 인적 자원에만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육체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혜택을 보게 하려는 정부 노력의 성공정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의 비숙련직 감소 현상은 저숙련자들이 앞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위험이 있으며 불평등 심화에 시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유층 학생과 빈곤층 학생 간에 공정한 환경 구축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숙련 인력채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적인 노동경쟁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음 사항이 지표에 드러난다:

- 다수의 국가에서 아버지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고등교육을 이수할 확률도 높다. 아일랜드, 스페인이 고등교육 진입이 가장 공평한 국가이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은 육체노동자 가정의 학생이 국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거의 절반만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록 취업률과 보수가 높다.

OECD 국가 경제는 안정권에 든 고학력 근로자 공급에 점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추이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 OECD 인구 고령화 여건에서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기간 연장은 의존인구 비중 감축과 공공연금의 자금조달부담 경감에 한몫할 것이다. 다음 사항이 지표에 드러난다:

- 대부분의 OECD 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고 대개 경우에 고등교육 이수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취업률이 월등히 높다.
- 여성 고용은 전체 취업률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25 세에서 64 세까지 개인 총 취업률이 가장 높은 7 개 국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는 여성의 취업률 또한 가장 높다.
- 취업률의 성별 격차는 저학력층에 더 심하게 드러난다. 중등교육을 못 받은 남자는 같은 입장의 여자보다 취업가능성이 23% 높다. 최고급 인력에서 이 차이는 10%까지 줄어든다.
- 25 개 OECD 국과 협력국가인 이스라엘은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이수자들이 받는 급여가 최종 학력이 중졸인 자에 비하면 50% 높은 수준이다.

**도표A9.1 대학학위 취득자의 개인수익성, ISCED 5/6 (2003)**



## OECD 국가는 전체 GDP 의 6.2%를 교육기관에 지출하며 교육제도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 속고하기 시작한다.

교육 참여 증대는 거대한 재정 투자로 뒷받침됐는데 1995-2004 년 사이 OECD 국가들이 모든 교육수준의 교육기관에 할애한 지출비는 평균 42% 늘었다. 아울러 현재 지출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업 성적을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표에 드러난다. 결과들 중에서:

- R&D 및 보조서비스 비용을 뺀 주요 교육서비스에 소요된 지출비는 학생당 평균 7,664 달러로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터어키의 4,500 달러 미만에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의 9,000 달러 이상의 수준 사이다.
- OECD 국에서 초중등교육 기간의 학생 1 인당 지출 비용은 평균 81,485 달러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어키의 4 만 달러 미만에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의 10 만 달러 이상의 수준 사이다.
- 하지만 1 인당 지출이 낮다고 해서 학업 성취율이 꼭 낮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네덜란드는 지출 비용이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2003 년 PISA 조사에서 최고 성과를 기록한 국가에 속한다.

**도표B2.1. GDP 대비 전체 교육 기관 지출 비중 (1995,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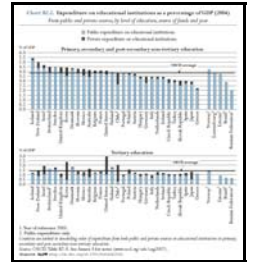




## 학교교육에 대한 민간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공공지출에서 교육기관에 할애하는 지출비 비중은 평균 13.4%로 체코, 독일, 그리스, 이태리, 일본의 10% 이하에서 멕시코, 뉴질랜드의 20% 이상 수준 사이에 이른다. 2004년 모든 교육수준에 걸친 교육지출비 가운데 87%가 공공재원이었다. 국가들의 비교가능한 가용데이터를 보면 1995-2004년 모든 교육수준에서 공공자금조달 비중이 전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학교교육에 대한 민간지출이 훨씬 더 늘어난 국가도 4분의 3이나 된다.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지출비용은 각각 24%, 20%가 민간재원이다.

도표B2.2. 2004년 GDP 대비 교육기관 지출 비중  
(아래 고등교육도표)



## 교육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등록금 뿐 아니라 민간재원의 비중도 OECD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A 유형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평균 등록금에 있어서 OECD 국가들과 경제협력국가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북유럽,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 등 OECD 국가의 4분의 1이 등록금 제도가 없으며 이와 반대로 OECD 국가의 4분의 1과 경제상대국들은 공공교육기관의 국내 학생이 1,500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경우다.

- 등록금 제도가 있어도 대규모의 공공지원금 혜택이 가능한 OECD 국은 A 유형 고등교육 진입률이 OECD 평균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 사람들은 인생 초기에나 후기에도 교육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유학 기회를 찾으려고 힘쓴다.

국가마다 비공식 교육과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 중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미국, 4개 OECD 국은 25-64세 연령층의 35% 이상이 지난 12개월 간 상급 교육에 참여했던 경우다.

- 고학력 성인은 저학력 성인보다 비공식 교육과 직업관련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영유아교육 또는 초등교육에 등록된 3-4세 아동 비중이 70%인 OECD 국은 절반 이상이며 유럽의 19개 OECD 국은 75.9%를 육박한 수준이다.

- 2005년 해외 교육기관에 등록 중이었던 고등교육 학생은 270만 명 이상으로 전년도 총 유학생 수에 비해 5% 증가한 셈이다.

## 수업시간, 교사 급여,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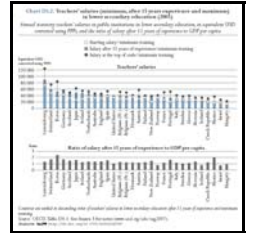
각국 학생이 학업에 보내는 시간과 헛수, 배우는 학교과목 선택을 통해 각국의 교육 우선순위 사항과 기호를 알 수 있다. 예산 여건 참작이 교육제도 수립을 다소 좌우한다: 학교교육의 제공 비용 차원에서 교사 급여 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 품질 유지와 지출 억제에 힘쓰는 정책결정자들은 교사 급여 사안을 꼭 고려해야 한다. OECD 국에서 학급 규모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으나 학급규모가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치 않다. 근본적인 교육정책사안과 관련한 일부 결과는:

- OECD 국가 9-11 세 학생의 의무수업 시간의 절반을 읽기, 쓰기, 수학, 과학 교육에 할애한다. 호주, 협력국가인 칠레, 이스라엘은 의무교육 과정의 13% 이하를 읽기, 쓰기, 수학 교육에 할애하며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는 30% 이상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 분야에 집중시키고 있다.

- 최소 15년 근무경력 중학교 교사 급여는 한국, 멕시코가 1인당 GDP 의 2 배를 웃돈 수준인 반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협력국가인 이스라엘은 75% 미만인 수준이다. 급여 수준은 헝가리가 16,000 달러 미만, 독일, 한국, 스위스가 51,000 달러 이상, 룩셈부르크는 88,000 달러 이상 수준을 육박한다.

- 2000-2005년 사이 평균 학급규모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으나 OECD 국가 간 차이는 좁혀진 것 같다. 학급 규모가 비교적 컸던 일본, 한국, 터어키는 학급규모가 줄었으며 학생 수가 비교적 적었던 아이슬란드는 학급규모가 늘어났다.

**도표D3.2. 2005년 중학교 교사 급여 (15년 경력자의 최저·최고 급여)**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